

## 안전협회 중학교 안전교육 지원



청소년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학교 안전교육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는 청소년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저동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여름방학 제외) 8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학교안전, 생활안전(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놀이안전 등의 교육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최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와 천안 소재 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안전 불감증 문제와 그에 따른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된 안전교육은 점진적으로 어린이,

## 대림산업(주)와 안전기술협약 조인식 가저



결하는 등 건설현장에 맞는 맞춤형 종합안전컨설팅 업무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앞으로 안전전문기관과의 안전기술 협약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협회는 대회의실에서 이홍지 회장과 전오성 상무를 비롯해 건설안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림산업(주)과 안전기술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서 이홍지 회장은 대림산업(주)의 안전의식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오늘 조인식을 계기로 대림산업(주)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오성 상무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기관인 안전협회와 안전기술협력을 맺게 되어서 기쁘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안전협회에서는 대야건설(주)의 전국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및 지도를 위한 안전기술 협약을 체

## 제2회 2003년도 안전그림 현상공모



안전협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전그림 공모전이 열린다.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현상공모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앞두고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재해예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른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행사이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내용, 인명 존중 이념의 실천과 관련하여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 학교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안전, 어린이·청소년들이 느끼는 안전문화를 자유롭게 표현한 내용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4절지 크기의 자유소재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발표는 6월 25일 하며, 7월 3일 CCEX 컨퍼런스센터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 : 02-860-7025~8, [www.safety.or.kr](http://www.safety.or.kr))

## 2002년 재해율 0.77%로 2001년과 동일

노동부는 2002년도 산업재해율이 2001년과 동일한 0.77%라고 발표하였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근로자 1인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 1,002,263개소에 근로자수는 10,571,279명이며, 이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1,911명으로 2001년도보다 477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사망자수는 2,605명으로 2001년보다 143명(5.2%)이 줄어 '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994년 3.41명을 기록한 이래 2002년에는 1.30명으로 줄어들어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업무상질병자는 5,417명으로 2001년에 비해 직업병자와 작업관련성질병자 모두 감소하여 236명(4.2%)이 줄었으나, 근골격계질환자는 1,827명으로 2001년보다 193명(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서 재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업에서는 18.8%인 3,154명의 재해자가 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91명의 재해자가 증가하였다.

건설업과 재해의 71%가 발생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마련

노동부는 4월 2일(수)사업주에게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건강장해 예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하 “보건규칙”）」을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규칙안의 사업주가 장시간동안 근로자를 용접작업이나 반복조립작업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시키는 경우 최소 3년에 한번은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근골격계 부담 경감 조치·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노동부장관은 근골격계질환자가 연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나 근골격계질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 예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중에 있다. 우선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보급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에 설치된 「근골격계질환 예방전담팀」을 통한 사업장 전문기술지원을 시행하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전문화를 위해 인간공학기사·기술사 자격신설 등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 안전규제 완화가 근로자의 권리 침해

국가안전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중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각종 규정을 완화해 근로자의 알권리 및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인식에 근거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7일 국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재해발생 사업장 등 공포대상 의무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의 개선, 도급금지 대상 작업범위의 추가 확대, 유해물질 표시규정의 보완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중 사업장 공포대상 선정, 안전분야 공동선임 범위, 유해물질 표시의무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강화돼야 할 규제이나 오히려 완화됐다”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보호 및 국가의 책무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로자 알권리 및 안전권 등이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문제는 근로자의 인권을 해치며 노사분규 등 기업의 경제 손실을 야기하고 국가의 직간접비용을 증가시켜 노사정 모두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근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